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음주·흡연·비만율 전국 최저 … 건강한 광주·전남 ▶2
'대포차 양산 주범' 중고차 매매상사 ▶7
컬쳐&피플 소설가 조정래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15호 1판 2014년 4월 9일 수요일 (음력 3월 10일)

安, 무공천 승부수 … 국민도 후보도 혼란

새정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국민·당원의 뜻 묻겠다" 선언

여론 50%·전 당원 투표 50%
오늘 조사·내일 공식 발표
결과 따라 선거판세 출렁일 듯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당원과 국민의 뜻을 (다시) 묻겠다"고 밝혀 '기초선거 무(無)공천'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게 됐다.

이는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한 출구 전략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신당 출범에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고, 기초선거 공천이 다시 이뤄질 경우 무소속 후보 등장 등 향후 선거 판세가 출렁거리며 지역별 선거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전 당원 투표로 결정=안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를 눈앞에 두고 무한정 논란만 계속 할 수 없다.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당내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결과가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제 원칙과 소신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과 당원보다 우선할 수 없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물어 결론이 나오면 총의를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전 당원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9일 국민 대상 여론조사 50%와 35만여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 50%를 반영하는 방식을 합산한 뒤 10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9일 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혼란스러울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는 게 새정치의 리더십"이라며 "이번 조사와 두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광주·전남, 혼란 속 반응 엇갈려=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옴에 따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최종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들은 공천제 유지를, 반대로 경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은 공천제 폐지를 각각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당사자들은 대체로 공천제 폐지 쪽에 기울어 있는 듯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현직 기초단체장에 맞서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이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당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춘문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은 이날 합의된 후보 단일화 일정과 룰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천 가능성이 높아져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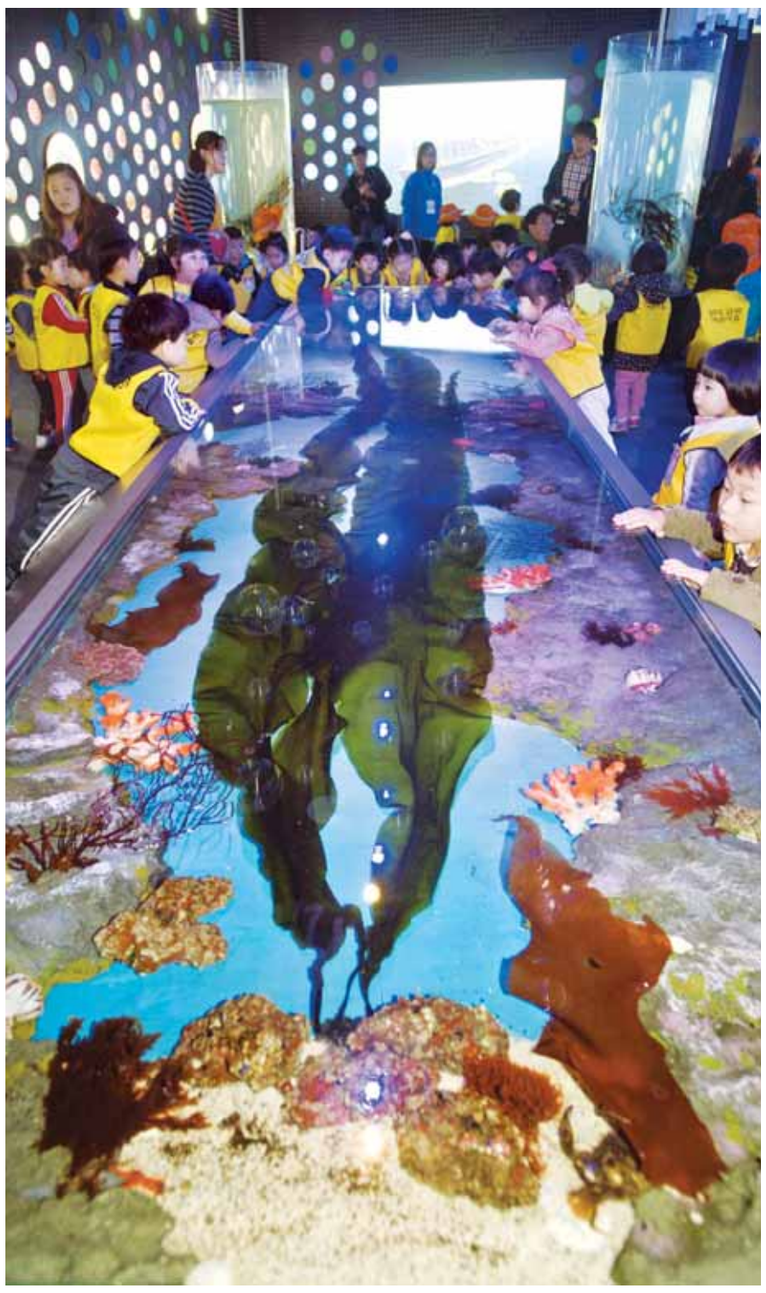
그러나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예비후보자들과 당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모 기초단체 예비후보는 "김-안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고리로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해 기초선거 출마예정자들과 당원들에게 한 차례 큰 혼란을 안겨주더니 또 다시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당원들에게 묻겠다고 한 것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애초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일부 입지자들 중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출마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다시 출마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해조류박람회 D-2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8일 열린 최종 예행연습에서 주제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완도의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관람하고 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완도군 일대에서 1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달동안 열린다. /완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신대학교 60주년
음악학과 설립 20주년 기념
교수음악회
4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광신대 진리관 4층 콘서트홀
062) 605-1130

호남예술제 오늘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문의 : 062-220-0541 홈페이지 : art.kjmedia.co.kr

'임을 위한…' 5·18 기념곡 지정 언제까지 '여론 수렴'만 할텐가

광주 정치권, 정부 질타

광주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여론 수렴' 탓만 하면서 유보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난해 6월26일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는데, 10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국가보훈처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국회와 국민 무시를 방조하겠다는 것이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에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기념곡 지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총리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워낙 강한 반대여론도 있어서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 결의안에 대해 "입법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면서 "존중은 하지만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이 40일 남았음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미루고 있어 정파를 초월해 기념곡 지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의 회동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광주시장 후보 회동을 시작으로 지역 전체 후보자 공동선언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 등을 통해 광주의 5월 의지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만권 사업 규모 대폭 축소되나

경제자유구역 9개 단지 해제 대상
이달말 산자부 구역위원회서 결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5분의 2에 대한 지정 해제 여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전체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광양만청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양만권 5개 지구 23개 단지 가운데 지정 해제 대상인 9개 단지에 대해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양만청은 이들 9개 단지가 관련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50% 이상의 국공유지 소유, 공유수면 매립,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등 '지정 해제 예외 요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불가능한 곳은 율곡지구 내 율촌 제2일반산업단지(3.79㎢), 제3일반산업단지(9.76㎢), 율촌항만(5.12㎢), 신덕지구 내 선월하이파크(1.1㎢), 광양복합(4.87㎢), 웰빙카운티(2.20㎢),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0.75㎢), 하동지구 덕천에코(2.54㎢), 두우레저(2.64㎢) 등이다. 모두 9개 단지로, 면적은 32.77㎢에 달하며, 전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83.59㎢)의 39.20%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9개 단지 모두 지정 해제 예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양만청은 이 외에도 신대휴면 등 5개 단지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에서 지정 해제(4.34㎢)와 면적 축소(1.54㎢)가 불가피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